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 평가

이태열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동아시아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간의 기적적인 성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여섯 가지 변수(노동력 증가율, 투자율, 경상수지, 물가, R&D, 수출)들과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대한 성장률의 의존도는 줄어드는 반면, 수출이나 R&D 그리고 물가 및 경상수지의 안정이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저물가 기조 정착 등 경제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 증대 노력과 R&D 활성화도 향후 소득 증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의 하락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을 지속하고 있으며 바트(Baht)화의 폭락으로 본격화된 외환 위기는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적으로까지 비유되던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

동아시아 경제 기적에 대한 평가

고성장을 지속하던 동아시아 경제가 최근 주춤거리고 있다. 경제 대국 일본은 거품 경기의 붕괴와 함께 90년대 들어 장기 불황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IT大의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교수는 최근 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재평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최근까지 지속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성장이 아시아

의 특수한 가치에 의해 발생한 기적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대에 따라 나타난 극히 일반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동아시아 경제가 향후 노동력 및 자본의 투입에만 계속 의존하고 생산성 향상과 같은 혁신을 등한시할 경우 성장 능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았다. 결국, 동아시아 경제의 선진화는 인적·물적 자원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성장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경제가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고는 우선 경제 성장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제 지표들과 실제 나타난 성장률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그리고 보다 자세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료는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

ment)의 1997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를 분석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고서에 나타난 46 개국 가운데 10 개국을 제외한 36 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도,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의 4 개국은 자료 불충분으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 국가라는 이유로 그리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스위스의 경우는 음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특수성이 있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노동력(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 투자율, 저축률, GDP 대비 수출액, GDP 대비 R&D,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증가율 등 일곱 가지의 변수를 감안하였다.¹⁾ 그러나 저축률, 투자율 그리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세 가지 변수 사이에는 선형의 관계가 있는 만큼 저축률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여섯 가지의 변수를 대상으로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²⁾ 위의 변수 가운데 노동력 증가율과 투자율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능력을, GDP 대비 수출은 대외 시장 확보

1)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는 1996년 기준임. 그러나 GDP 대비 수출(재화와 용역)액의 경우는 1995년, 노동력(경제 활동 인구) 증가의 경우는 1991~96년 평균 자료가 사용됨.

2) 국민소득 항등식으로부터 유도된 (경상수지 = 저축 - 투자)를 의미함.

능력을, GDP 대비 R&D 지출은 생산성 향상 또는 혁신 능력을,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과 GDP 대비 경상수지는 경제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대표하는 변수는 물론 실질 GDP 성장률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라 할지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이 기록한 것과 미국이 기록한 성장률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DP)을 이용해서 성장률을 조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고에서는 세 가지의 경제 성장률이 분석된다. 첫째는 실질 GDP 성장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36 개 국가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의 평균을 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나누어 '상대 소득 수준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실질 GDP 성장률을 '상대 소득 수준 계수'로 곱하여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도록 조정된 것이다. 셋째로 '조정 경제 성장률'이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을 지나치게 반영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대 소득 계수에 제곱근을 취해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의 반영도를 줄인 지수를 산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를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로 칭하기로 한다. <표 1>은 세 가지 개념의 성장률에 대해서 각각 상위 10 개국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GDP 성장률→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로 갈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성장률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주게 되어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³⁾

우선 GDP 성장률의 경우, 상위 10 개국 가운데 중국(2위), 말레이시아(3위),

〈표 1〉 세 가지 성장률 개념에 따른 상위 10 개국

(%)						
순위	국가명	GDP 성장률	국가명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국가명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1위	아일랜드	10.3	아일랜드	10.8	아일랜드	11.4
2위	중국	9.7	아이슬란드	7.4	노르웨이	10.5
3위	말레이시아	9.5	노르웨이	7.1	아이슬란드	9.5
4위	태국	8.7	한국	5.8	일본	7.7
5위	인도네시아	8.0	일본	5.1	네덜란드	5.4
6위	칠레	7.2	말레이시아	5.1	스웨덴	5.2
7위	한국	7.1	대만	5.1	한국	4.7
8위	폴란드	6.0	이스라엘	4.5	이스라엘	4.6
9위	대만	5.7	네덜란드	4.4	대만	4.5
10위	아이슬란드	5.7	칠레	4.0	미국	4.3

태국(4위), 인도네시아(5위) 한국(7위) 대만(9위) 등 총 6 개국이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의 동아시아 7 개국 가운데서 일본(16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 조정 성장률의 상위 10 개국에는 일본(5위)이 새롭게 포함되는 반면,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3 개국이 제외됐다. 마지막으로, 조정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상위 10위권에 일본(4위) 한국(7위), 대만(9위)의 3 개국만이 포함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제외되었으며, 중국(34위), 인도네시아(32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분 조정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4위 그리고 조정 경제 성장률에서는 7위로 나타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경우에도 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계수를 통한 분석

본 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설명하는 변수들과 전장에서 논의된 세 가지 성장률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성장률과 이를 설명하는 변수들과의 상관 관계는 편의상 상관 계수의 절대값이 0.25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 GDP 성장률 × (1인당 GDP / 36 개국 평균 1인당 GDP).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 GDP 성장률 × √(1인당 GDP / 36 개국 평균 1인당 GDP).

우선 실질 GDP 성장률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 변수는 노동력 증가율, 투자율, GDP 대비 수출액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력 증가율과 투자율이 경제 성장률과 갖는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많을 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GDP 대비 R&D 지출액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저소득 국가들의 R&D 지출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의 경우,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는 노동력 증가율과 GDP 대비 수출액으로 나타났다. 특히, GDP 대비 수출액의 상관 계수는 0.374로 나타나 GDP 성장률과의 상관 계수인 0.252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시장 확보 능력이

지속 성장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을 크게 반영한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의 경우 상관 관계를 갖는 변수는 GDP 대비 R&D, GDP 대비 수출액, GDP 대비 경상수지, 물가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은 수준에서도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시장의 확보 능력과 더불어 높은 R&D 투자에 의한 혁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안정 그리고 저물가 기조의 정착과 경제 안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GDP 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율이나 투자율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들 변수들과 성장률과의 관계는 하락하는 반면,

〈표 2〉 성장률과 성장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

	GDP 성장률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
노동력 증가율	0.537 (+)	0.418 (+)	0.225
투자율	0.552 (+)	0.056	-0.166
GDP 대비 수출액	0.292 (+)	0.374 (+)	0.264 (+)
GDP 대비 R&D	-0.343 (-)	0.201	0.428 (+)
GDP 대비 경상수지	-0.187	0.195	0.392 (+)
물가 상승률	0.121	-0.175	-0.283 (-)

R&D,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등과 같은 변수들이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 수준이 상승하여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와 물가 및 경상수지의 안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성장률 모두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성장을 위해 대외 시장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상관 계수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10%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GDP 성장률의 경우 노동력 증가율과 투자율이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분 소득 조정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GDP 대비 수출액과 노동력 증가율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소득 조정 성장률'의 경우에는 GDP 대비 R&D 투자율과 노동력 증가율이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장의 분석과 비슷한 것이다. 즉, 높은 성장률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외 수출과 같은 시장 확보 능력 그리고 R&D 투자와 같은 혁신 능력이 지속 성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표 3〉 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GDP 성장률		부분 조정 성장률		조정 성장률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0.360	(-0.48)	0.082	(0.11)	0.263	(0.28)
GDP 대비 수출액	0.031	(1.51)	0.041	(2.05)*	0.033	(1.26)
투자율	0.162	(2.99)*	0.009	(0.17)	-0.017	(-0.25)
GDP 대비 경상수지	0.211	(1.63)	0.138	(1.11)	0.235	(1.46)
GDP 대비 R&D	-0.707	(-1.43)	0.583	(1.23)	1.164	(1.90)*
물가 상승률	0.033	(1.15)	0.017	(0.62)	0.000	(-0.1)
노동력 증가율	0.838	(3.52)*	0.693	(3.03)*	0.626	(2.11)*

주: *는 유의 수준 10%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변수.

맺음말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성장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능력을 보자. 노동력 증가율과 투자율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위 10 개국 가운데 각각 4 개국, 6 개국이 포함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 능력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당분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경제의 대내 및 대외 안정성을 보자. GDP 대비 경상수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물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는 상위 10 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⁴⁾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안정 기조가 취약함을 의미한다.

셋째로 대외 시장 확보 능력과 혁신 능력을 보자. GDP 대비 수출과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수출은 3 개국, R&D

는 2 개국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적·물적 자원의 대량 투입 이외에 다른 성장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에는 경제 안정 기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며, R&D 지출 증대와 같은 혁신 능력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 36 개국 가운데 노동력 증가율은 6위, 투자율은 4위, GDP 대비 경상수지는 32위, 물가 안정은 24위, GDP 대비 수출은 16위, GDP 대비 R&D 지출은 3위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능력 및 혁신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외 시장 확보 능력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장 여건은 인적·물적 자원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4) 본 고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률 상위 10 개국은 물가 상승률이 낮은 10 개국으로 선정한 것임.

국가의 성장 여건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최근 R&D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화 또는 혁신 능력의 향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안정 구조의 정착이다. 본 고의 분석에 따르면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 불안은 국가 경제가 지속 성장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장애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안정 기초 정착의 미비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안정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아직 훌륭한 성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

속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안정 기초 정착에 주력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R&D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인구노령화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 투입에 의존한 성장 전략으로부터의 탈피는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HRI

(표 4) 성장 변수별 상위 10 개국

순위	노동력 증가율	투자율	GDP 대비 경상수지	인플레이션율 (하위 10 개국)	GDP 대비 수출	GDP 대비 R&D
1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일본	말레이시아	일본
2위	말레이시아	태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스웨덴
3위	칠레	중국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한국
4위	아르헨티나	한국	대만	노르웨이	체코	미국
5위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6위	한국	체코	핀란드	스웨덴	대만	핀란드
7위	인도네시아	일본	스웨덴	독일	태국	독일
8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9위	중국	터키	일본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10위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주: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안정될수록 성장에 유리한 만큼 낮은 순으로 상위 10 개국을 선정하였음.